



도, 상반기에만 예산 60% 신속집행한다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점 투입
1억원 이상 투자·이월사업 상반기 내 최대한 집행
내년 국비 목표 2조4000억… 4월 말까지 사업 발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을 60.5%를 목표로 삼고 본격적인 신속집행에 나선다.

제주도는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60.5%로 설정했다.

도민 생활과 직결된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1분기부터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과 이월사업은 상반기 내 최대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긴급입찰과 각종 행정절차 기간 단축 등의 제도를 활용해 집행 속도를 높이고 실적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부여할 계

획이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일일 단위 집행 점검, 부서별 찾아가는 사업추진 컨설팅, 정례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재정 신속집행과 더불어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제주도는 2027년 국비 확보 목표를 올해보다 2234억원(10%) 늘어난 2조4576억원으로 잡았다. 1월 현재 183건, 1436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휴식(위케이선) 총괄센터 구축(50억원)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15억원) ▷구 제주경찰청사 그린리모델링

(21억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36억원) ▷기후테크 연구개발(R&D) 지원(13억8000만원) 등이다.

탐라역사문화권 정비(29억4000만원), 태양광 연계 RE100 감광시설(30억원), 로컬 블루푸드 복합문화센터(10억원) 등 제주 특성을 살린 사업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4월 말 중앙부처 예산신청 시기까지 신규사업 발굴을 이어가고,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사업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 중앙부처와 국회 절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민주당 도당 “억울한 공천 배제 없도록” 지방선거기획단, 공천 원칙 발표… 4월까지 경선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2일 제주도의 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원칙과 관련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미 기획단장을 비롯해 이승아·한권 도의원, 이승돈 제주시갑 위원회 사무국장, 이재호 기획위원이 참여했다. 송영훈 기획위원은 날씨 일정 상 불참했다.

기획단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제주 발전과 이재명 정부 성공,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선거”라며 “6월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무한도전 4무(無) 원칙”으로 ▷부적격 후보자 제로 ▷억울한 컷오프 제로 ▷낙하산공천 제로 ▷불법심사 제로 등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지방선거 목표 의식을

문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현재와 같은 27석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이어 “오는 26일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를 통해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며 “2월에 예비후보자 심사위원회를 가동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3월에는 공천 심사를 진행한다. 4월까지 경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공천심사 일정을 밝혔다. 비례대표는 별도로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권리당원 투표로 4월 안에 순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은 오는 26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분구에 대해 기획단은 “선거 일정상 의원정수는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선거구 분구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어 선거를 치르는 후보들 입장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오소범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 이원화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가운데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 설치해야”

국회 토론회서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 논의

이재명 정부가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후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가운데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22일 국회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을 비롯해 이해식·이상식 민주당 국회의원, 전국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치경찰 이원화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이래 2021년 현행 국가경찰 중심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현행 '일원화 모델'은 국가경찰 조직 안에서 사무만 분리된 형태로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행의 일원화 모델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 부재, 모호한 사무 분장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뼈아픈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제안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은 시·도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설치해 자치경찰이 민생 치안을 온전히 책임지게 하고, 시·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임용권을 부여해 지역 맞춤형 치안을 펼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가경찰은 광역 수사와 국가 사무에 집중하고, 자치경찰은 주민 밀착형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하자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 의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장(동의대 교수)은 '현행 자치경찰제의 평가와 한계'를 다룬 발제에서 “자치경찰 이원화는 지방의회 및 주민 감시로 경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수립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개선은 국가경찰 권한의 축소가 아닌 국가 치안체계 재편 과정으로, 시대적 요구이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자치경찰 이원화 방향 및 보안 설명' 발제에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보조자나 틈새 치안 담당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지역 치안 사무를 자율적·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 인력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구경찰청장과 부산경찰청장을 지낸 이상식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역 간 치안 서비스의 질적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또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강화가 자칫 경찰 본연의 가치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하수처리장 증설·관로 정비 2677억 투입

하수 처리 용량 대폭 확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올해 하수처리 수요 증가와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비해 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관로 정비에 2677억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하수처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동부·대정·색달·성산 등 5개 공공하수처리장에 1318억원을 투입해 증설사업을 추진한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는 올해 1199억원을 집중 투자해 2단계 사업인 전처리시설과 슬러지 처리시설, 내부방류관로(297m)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부하수처리장은 35억원을 투입해 처리 용량을 하루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2배 늘리는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가동할 예정이다.

대정과 색달하수처리장은 증설을 위한 설계를 진행중으로 이 가운데 대정하수처리장은 67억원을 들여 처리용량 확대 공사를 상반기 중 시작한다.

올해 신규사업인 성산하수처리장은 8억원을 들여 증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하수의 안정적인 이송을 위한 하수관로 49km를 정비하고, 기후변화로 잦아진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침수 대응사업(화북·대정하도 2곳)과 신규사업인 맨홀 추락방지 설치사업 등에 1359억원을 투자한다.

제주도는 하수처리구역의 단계적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하수처리시설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광역하수도정비 계획 고도화에 19억원을 투입, 지역별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소범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치,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KOREA PRESTIGE BRAND AWARDS 2022